



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내용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·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‘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’을 발표함.

- 2011년 3월 말 가계부채가 801조 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3.0% 증가하였으며, 동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 7.3%를 상회하는 수준임.
-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유지되고, 취약한 대출구조 및 저신용층 상환여력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·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.
- 이에 금융위는 민관합동 T/F 작업을 통한 논의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거시·미시적 정책대응 강화와 가계충격 최소화를 목표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함.

■ 가계부채 적정증가 관리를 위하여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억제하고,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한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.

- 고위험대출과 특정부문 편중대출에 대해서는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,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는 가계대출 실적평가를 폐지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수정함.
- 채무자의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통한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함.
- 예대율이 100%를 초과한 은행에 대하여 2013년 말까지였던 예대율 100% 준수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할 것을 지도하는 등 은행 예대율 관리를 강화함.
-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 확대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, 레버리지(총자산/자기자본)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며, 대손충당금 제도의 단계적 강화도 추진함.
-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, 개인신용평가 시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하며,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함.

- 가계대출 구조 개선방안으로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활성화 유도과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은행의 장기자금조달 지원방안이 제시됨.
 - 현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,000만 원을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1,500만 원으로 확대하고, 기타 대출의 경우 500만 원으로 축소함.
 -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인하하는 대신에 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인상하며, 은행이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자체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게끔 하여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함.
 -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지원방안으로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MBS 발행지원과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추진 등이 제시됨.

- 또한 변동금리대출 설명의무 강화, 고정금리대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대출모집인 불법·부당행위에 대한 점검강화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도 추진함.

- 한편,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기반 강화도 추진함.
 - 미소금융·햇살론·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확대, 저신용·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,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·전환대출 등에 노력함.

(가계부채 연락처 종합대책, 금융위, 6/29)